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금융감독원 2026.07.27.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 (Beyond Finance, Into the Future)”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개최 안내

금융위원회 2026.07.30.

'26.11.25일(수)부터 11.27일(금)까지 3일간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6」가 서울 aT센터(양재)에서 개최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AI 등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투자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대수명 83.7년으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양호

보건복지부 2026.07.2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7일 발표한「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현황 등을 공표하였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보건복지부 2026.08.0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입법 자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07.23.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가 2027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조합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함. 아울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비중 제한 기준이 10년 넘게 유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1인 2026.07.28.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증가로 첨단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기술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정의나 관련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는 중·형방향 주행을 지속 제어하는 국제기준을 이미 마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2026.07.29.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획일적 급여를 지급하여, 한정된 재정 내 최극빈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 및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국민연금 연계 등 복잡한 산정방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일률 배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생계급여 감액(‘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채권 외에도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수행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증권 외의 자산에 투융자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26.07.29.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 법원 판결로 범죄가 입증되었음에도 청문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종사자 진입을 막을 자격 제한 기준이 미비하고, 대형화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